

“기계는 권력의 지도”: 인공지능과 프로그램된 불평등

발표문에서 오늘날 생활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인공지능문화에 대해서 기초적인 용어 활용 및 개념 뿐 아니라 기술적 범위와 한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질문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기술주도의 사회 변화, 사회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성되고 있는 공적 담론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질문 거리가 풍부하게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변화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으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관련학과들도 융복합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인공지능문화가 담지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화화된 오해들에 대해 활발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빅데이터의 기계학습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이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시스템의 요구에 의해 편의적으로 작동하게되는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 비판적 개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를 발제자의 표현을 빌어 얘기하면 기존의 알고리즘 작동방식의 맹점으로 지적하신 “미지의 영역을 찾아 나서는 지적인 모험, 현실에 없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지적인 상상과 계획”의 부재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그리고 공공담론의 차원에서, 또 관련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지어 논의해볼 수 있는 지점들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의 작동방식과 그 영향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알파고와 유튜브 추천시스템 사례를 들어 짚어주신 디지털 미디어 알고리즘의 블랙박스화 현상,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적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차원에서는 발제자께서 이전 논문에서 다루신 것과 같은 사회과학과 사이버네틱스(환경)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요구되는 인식론이나 방법론 차원의 전환,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위한 연구방법의 고안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술적 범위와 한계를 바탕에 둔 공공담론의 생성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포털사를 중심으로한 IT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면서, 2018년 카카오는 데이터의 수집 및 이를 가공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 등에서 차별이나 왜곡을 막기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차별 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IT 기업들의 운영 정책이 공공담론의 영향으로 변화를 맞이한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

랫동안 지속되어온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이버불링의 부작용을 억제하기위해서 연예 뉴스의 댓글이 폐지되었고, 음원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멜론의 실시간 차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들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사회가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려준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윤리가 일회적인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환경에 대한 비판적 공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풍부한 학술적 논의들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올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발표문에서도 소개된 것과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 경제성장의 동력이나, 노인 문제나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의 필요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청사진을 살펴보면 약 9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AI,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1·2·3차 산업의 선진화, 5G, AI 융합 확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기능에 있어서는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이라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항목 안에서 협소하게 논의되고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표문에서 소개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inclusive) 접근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들은 블랙박스화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기술들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촘촘하게 현재의 기술환경에 대한 논점들을 짚어주신 것에 비해 토론이 다소 두서없이 진행된 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